與 '세종시 혼선' 고민… 퇴로찾기 나섰나

"발언 자제" 입단속… 대안통과 주력

특위 8일 광주·전남 방문 여론 수렴

여권이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 중도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고민에 빠졌다.

여권이 모든 힘을 모아 밀어붙여도 될 수 있을지 모를 판에 대통령과 총리, 주류 측 인사들까지 나서 '퇴로'를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 중진 의원은 3일 "최근 들어 갑자기 원안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스럽다"고 말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정부 대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발언의 수위가 예전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더욱이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멘 정운찬 총리까지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해 여권을 혼동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처럼 혼란이 가중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수정론 포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입단속을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 내부에서 '안될 경우'를 가정해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원론적 차원의 얘기라고 본다"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한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 우리가 '드롭'(수정 포기)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의원들은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개인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으로 여론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매주 화요일 특위 조찬회의에 전문가들을 모셔 찬반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정부 수정안이 나온 후에도 의견을 계속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8일 광주·전남을 방문하는데 이어 14일 대구, 18일 수원을 찾아 여론을 수렴한다.

청와대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비서관들이 지역에 내려가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 국민과 정치권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사수 총궐기 대회를 열고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천안서, 선진당은 보령서

세종시 원안 사수 여론몰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3일 충남을 찾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충청권의 반대 여론을 결집, 이를 발판으로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인 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행복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을 규탄하고 원안 사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의 변질 및 백지화를 획책하는 정권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공약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세종시의 무산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어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이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8일에도 대전에서 장외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후에는 전국의 혁신도시를 돌며 여론전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이회창 총재와 김낙성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충남 보령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홍보전을 갖고 세종시 수정 추진을 비판한 뒤 인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세종시 수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선진당은 이어 4일 아산, 7일 태안과 서산에 이어 10일 부여 및 청양을 끝으로 충남 16개 시.군과 충북 청주, 대전에 걸친 한달여 간의 1차 순회 홍보전을 마무리한다.

또한, 11일에는 서울이나 대전에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인 뒤 혁신도시로 여론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에는 백범기념관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원안사수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알릴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45%"

R&R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신뢰수준 95%±3.46%P)을 상대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0%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4.2%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2.0%였으며, '보통 또는 모르겠다'는 반응은 13.0%였다.

특히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의 경우 각각 지난달 조사보다 11.5% 포인트, 10.8% 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11.0% 포인트 하락한 점이 관심을 끈다. 연령별로는 50대 미만에서 지난달에 비해 지지도가 상승했으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의 '특별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4대강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 실시됐다는 점에서 세종시.4대강 사업을 둘러싼 지역별.연령별로 온도차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별 지지도는 한나라당의 경우 31.7%로 지난달 조사(32.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민주당은 19.1%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6.6% 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민주노동당 4.0%, 진보신당 2.5%, 친박연대 2.3%, 자유선진당 1.5%, 창조한국당 0.8% 순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충청 민심 악화 대변 초강수

내년 초 여권 지형변화 염두 포석 관측도

■ 이완구 충남지사 사퇴 배경과 파장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가 2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 도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 원안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며 지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제도 시행 이후 현직 지사가 중도에 사퇴한 것은 2003년 12월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한나라당 탈당 사직,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2006년 3월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중심당의 선거승리 등을 위해 사퇴한 이후 사상 세 번째다.

이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된 지금 누군가는 법 집행이 중단된 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준 국민 여러분, 원안추진을 당부한 충남도민 여러분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효율'을 얘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는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신뢰'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서 "행정도시가 무산될 때 신뢰는 깨질 것이며 국민의 좌절과 상처, 갈등과 혼란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전격적인 사퇴로 여권은 정국운영에 부담을 갖게 됐다.

이 지사의 사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탄탄한 재선 가도를 달려온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사퇴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종필(JP) 자민련 전총재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충청권 맹주'의 위상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충청권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을 경우 내년 2, 3월께 있을 수도 있는 여권의 정치지형 및 역학구도의 변화 과정에서 충청권의 대표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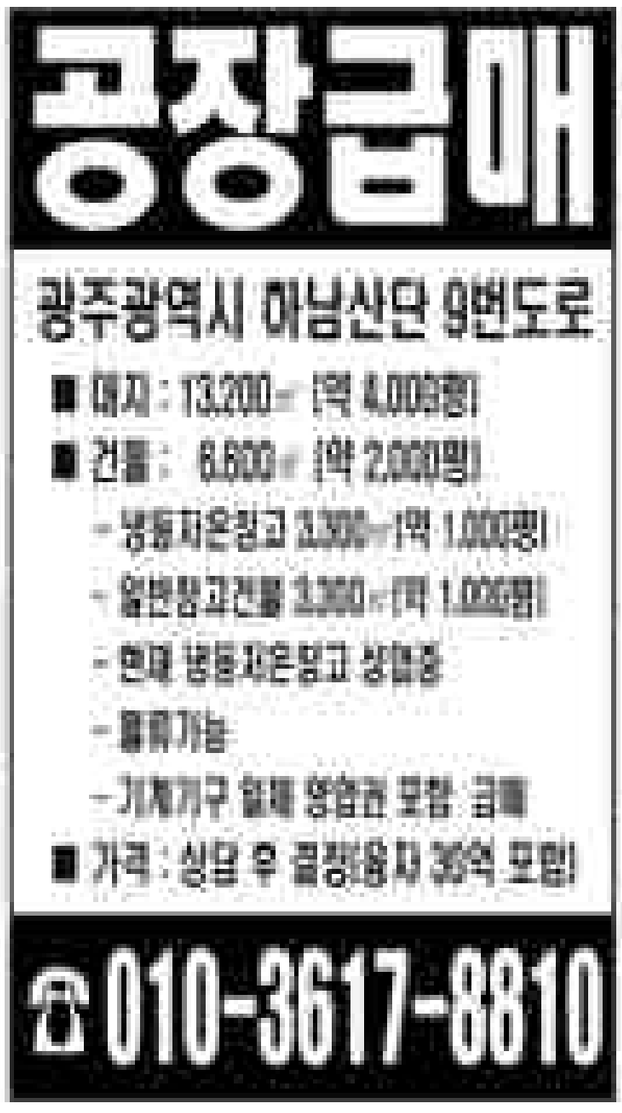
이재오 "권익위 계좌추적권 수정 용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입법 예고된 권익위법 개정안의 쟁점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신설 논란과 관련,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도 법원의 명령과 영장을 받는 등 그 어디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의 계좌추적권은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실무자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며 "권익위가 부패 고발의무를 충실히 하고 신고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면 최소한 1회에 열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권익위가 영장 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